

1. 다음 중 비용편익분석이 평가하고자 하는 가치로 옳은 것은?

- ① 형평성(Equity)
- ② 실현가능성(Feasibility)
- ③ 능률성(Efficiency)
- ④ 민주성(Democracy)
- ⑤ 대응성(Responsiveness)

[정답] ③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에 소요되는 편익(B)과 비용(C)을 분석하여 경제적 합리성, 특히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정책분석기법이다.

2. 다음 중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실체설은 사익을 조정해 공익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정설이라고도 한다.
- ② 과정설은 다원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정책결정 과정을 전제로 한다.
- ③ 실체설에서는 사익의 총합이 곧 공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 ④ 공익은 국가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정책평가의 기준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 ⑤ 행정의 최고 가치로서 공익 개념은 공·사행정 일원론 시대에 강조되었다.

[정답] ② 과정설은 공익이 사익 간 갈등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며, 공익 결정 과정은 민주적이고 다원적이다.

- ① 공익의 실체설(적극설)과 과정설(소극설)은 다른 개념이다.
- ③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의 단순한 총합을 초월한 실체라고 주장했다.
- ④ 공익은 국가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정책평가의 기준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 ⑤ 행정의 본질적 가치에 속하는 공익은 신행정론 등에서 강조하는 가치의 개념인 만큼, 정치행정일원론(공사행정일원론) 시대에 강조된 개념이다.

3. 다음 중 주민자치제도와 단체자치제도의 차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치권의 인식에서 주민자치는 고유권으로, 단체자치는 전래권으로 본다.
- ② 주민자치는 권한부여방식으로 포괄적 위임주의를 채택하고, 단체자치는 개별적 지정주의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 ③ 사무구분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지만 단체자치는 이를 구분한다.
- ④ 주민자치는 자치정부에의 주민 참여를 중시하고,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중시한다.
- 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의 경우 주민자치는 기능적 협력관계, 단체자치는 권력적 감독관계의 성격이 강하다.

[정답] ② 주민자치는 개별적 지정주의를, 단체자치는 포괄적 예시주의를 택한다.

4. 다음 중 비공식집단의 순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리적 안정감 제고
- ② 계층제의 경직성 완화
- ③ 품의제적 의사전달의 활성화
- ④ 구성원 간의 협조를 통한 직무의 능률적 수행
- ⑤ 구성원의 행동 기준 확립으로 사회적 통제 기능 수행

[정답] ③ 품의제도는 조직의 하급자가 문서를 기안해 관련 부서에 회의(回議),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상급자의 결재를 차례로 얻어가는 업무처리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이 제도는 공식집단의 특징이다.

5. 다음 중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 노동조합은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 공무원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실적제를 약화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 ② 공직의 특수성에 비춰 공무원 노동조합의 구성과 활동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단체행동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③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현대 인사행정에서 중시되고 있는 관리 도구의 하나이다.
- ④ 6급 이하 일반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과 공무원 직장협회의 가입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⑤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특성 중 하나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법규가 많고 그러한 법규정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정답] ① 전통적 견해(부정론)에 의하면 공무원단체는 실적주의와 능률성을 저해하나, 현대적 입장(긍정론)은 공무원단체가 투명하고 쌍방향적인 의사결정을 도와 실적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한다.

② 공무원 노동조합의 구성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등(공무원노조법 제11조) 단체행동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④ (O)

공무원노조법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가입 범위) ①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

6. 다음 중 2016년 현재 지방자치단체인 것은?

- ① 평해읍
- ② 서귀포시
- ③ 진천읍
- ④ 원주시
- ⑤ 제주시

[정답] ④ 강원도 원주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

- ①, ③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은 자치단체가 아니다.
- ②, ⑤ 제주특별자치도 아래에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임에 유의한다.

7.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과 직업공무원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했다.
- ② 대표관료제의 기본 전제인 적극적 대표성은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 인구구성의 특징이 관료제의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대표성을 지닌 관료집단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균형있게 대변하여 관료제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 ④ 대표관료제는 관료제 인적 구성 비율을 사회의 각 집단에 비례하도록 구성하여 정부관료제의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⑤ 대표관료제를 실시할 경우 임용할당제로 인한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②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 인구구성이 관료제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족한 것은 소극적 대표성(구성론적 대표성)이다. 적극적 대표성(역할론적 대표성)은 이에 더해, 관료가 출신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하며 그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것을 말한다.

- ⑤ 대표관료제는 공직 내 사회적 소수집단의 구성비도 그대로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다수집단 출신자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8. 조직 내 의사전달의 장애요인 중 전달자와 피전달자에 기인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준거 기준의 차이
- ② 전달자의 자기방어
- ③ 전달자의 의식적 제한
- ④ 피전달자의 전달자에 대한 불신
- ⑤ 정보전달 채널의 부족

[정답] ⑤는 의사전달의 장애요인 중 구조적 요인에 해당한다.

9. <보기>는 정책과정에 대한 이론적 관점들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이다. 다음 중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사회의 현존 이익과 특권적 분배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요구가 표현되기도 전에 질식·은폐되거나, 그러한 요구가 국가의 공식 의사결정 단계에 이르기 전에 소멸되기도 한다.

- ① 정책은 많은 이익집단의 경쟁적 타협의 산물이다.
- ② 연구의 초점이 정부의 공식적 기구와 제도에 맞추어져 있고 이익집단과 언론기관과 같은 비공식적 조직은 연구에서 배제된다.
- ③ 실제 정책과정은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보수적인 성격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 ④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market)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 한다.
- ⑤ 후기 산업화 단계에서 고용주연합과 노동조합은 더 이상 사회집단의 일원으로 남아 있지 않고 국가와 함께 지배 기구로 편입되어 국가 정책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정답] ③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의 무의사결정론이다. 무의사결정론은 정책과정에서 지배 엘리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문제만 정책의제화되고, 엘리트의 이익에 방해가 되거나 잠재적 도전이 되는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도록 억압되고 방해되는 이른바 ‘현상유지적 비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뿐 아니라 정책과정 전반에서 발생하고, 여기서 실제 정책과정은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는 보수적 성격을 띠게 된다.

10. 다음 중 정부가 민간위탁하기 어려운 업무는?

- ①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②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
- ③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사무
- ④ 국가의 검증 시험연구 등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
- ⑤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등

[정답] ④ 단순사실행위·행정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 능률성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지만,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직접 맡아서 처리해야 한다.

11.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에 대한 다음 이론 중 성격이 다른 것은?

- ① 브룸(Vroom)의 선호-기대이론(preference-expectation theory)
- ② 애덤스(Adams)의 형평이론(equity theory)
- ③ 포터와 로울러(Porter and Lawler, III)의 성과-만족이론(performance-satisfaction theory)
- ④ 조고폴러스(Georgopoulos)의 통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
- ⑤ 아지리스(Argyris)의 미성숙-성숙이론(immaturity-maturity theory)

[정답] ⑤ Argyris의 미성숙-성숙이론은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에 해당하며, 나머지 보기는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에 해당한다.

12. 다음 중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단으로 간주되던 규칙 준수가 목적이 되는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
- ② 조직 내 대인관계에 대한 비인격성이 초래하는 조직 내 인간성 상실
- ③ 새로운 결정을 하지 않고 선례에 따르거나 상관의 지시에 영합하는 무사안일주의
- ④ 고도로 전문화되고 분화된 업무 구성에 기인하는 훈련된 무능
- ⑤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데서 오는 행정의 독선화

[정답] ① 파킨슨의 법칙은 업무량 증가와 공무원 수의 증가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공무원 수는 일의 분량과 관계없이 증가함을 통계학적으로 증명한 법칙이다. 수단으로 간주되던 규칙 준수가 목적이 되는 현상은 동조과잉 내지는 목표대치(목표와 수단의 전도)이다.

13. 다음 중 정책의제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외부주도형 의제설정에서는 정부 내부의 정책결정자가 주도적으로 정부의제를 먼저 설정하고 정책순응 확보를 위해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친다.
- ② 내부접근형은 정부의제가 공중의제가 되지 않고 곧바로 정책의제로 채택된다.
- ③ 동원형 의제설정에서는 정부 외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특정 사회문제의 정책의제화가 주도된다.
- ④ 정책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가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가 높은 경우에 비해 정책의제화가 용이하다.
- ⑤ 정부기관의 입장에서 정책문제의 해결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인지될 경우 정책의제화가 어렵다.

[정답] ② 내부접근형은 사회문제가 곧바로 정책의제로 채택되며, 이슈화나 공중의제화 단계가 의도적으로 생략된다.

- ① 정부가 먼저 의제를 일방적으로 설정한 후 정책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공중의제화하는 것은 동원형이다.
- ③ 외부의 다양한 행위자 집단에 의해 사회문제의 정책의제화가 주도되는 것은 외부주도형이다.
- ④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가 낮으면 정책의제화가 어려워진다.
- ⑤ 정책문제의 해결이 쉬울 것으로 인지되면 정책의제화가 용이해진다.

14. 다음 중 바우처제도(Vouch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통적 행정서비스 공급은 '수요자-공급자'의 수평적 이용구조이고, 바우처제도는 '수급자-제공기관'의 수직적 구조이다.
- ② 신공공관리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행정서비스 공급방식으로 넓은 의미의 민간화(민영화)의 한 수단이다.
- ③ 행정서비스 생산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되 수요자들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여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 ④ 미국의 식품구매권(food stamp) 제공이 이에 해당된다.
- ⑤ 우리나라는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했다.

[정답] ① 설명이 반대로 되었다. 전통적 행정서비스 공급이 '수급자-제공기관'의 수직적 구조였다면, 바우처제도는 쿠폰을 받은 수요자들이 공급자를 자유로이 선택하는 '수요자-공급자'의 수평적 이용구조이다.

② 바우처제도는 신공공관리의 시장중심 정부운영 방식으로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시장원리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도구이다.

15. 다음 중 우리나라 공무원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통칭하는 말이다.
- ②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의 한 유형이다.
- ③ 법관과 검사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 ④ 국회사무총장, 감사원장 등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 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정답] ④ 둘 모두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① 일반직 외에 특정직 공무원도 특수경력직이 아닌 경력직 공무원에 속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②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한 유형이고, 특정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의 한 유형이다.

③ 법관과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이므로,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특정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이다.

16. 다음 중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45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 ② 수정예산은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 ③ 잠정예산은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국고지출을 허가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다.
- ④ 준예산은 우리나라에서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용하는 제도로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집행될 수 있다.
- ⑤ 우리나라가 채택한 적이 있는 가예산의 경우,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때 정부는 1개월 이내의 시간 범위 내에서 가예산을 지출할 수 있으며 국회의 의결은 불필요하다.

[정답] ③ 잠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는 제도이다.

① (X)

헌법 제54조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가 확정하기 전에 생긴 사유로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이다.
- ④ 준예산에 대한 설명은 옳으나, 준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 ⑤ 가예산은 우리나라 제1공화국 때 채택된 적이 있으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때 1개월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으나,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17. 다음 중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을 직접 수반하지 않는다.
- ② 행정지도를 받는 시민은 특정한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이나 단체일 수도 있다.
- ③ 행정지도는 새로운 또는 긴급한 행정수요에 응급적으로 또는 보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④ 행정지도는 권력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지도형식에 일률적인 제한을 받는다.
- ⑤ 과거 개발연대에 행정이 민간부문의 발전을 선도·관리하면서 행정지도의 영역이 매우 확대되었다.

[정답] ④ 행정지도는 공권력이 수반되지 않는 이른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그 형식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18. 다음 중 예산결정의 점증주의적 접근방법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협상과 타협의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
- ② 지출대안의 탐색과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③ 예산과정 참여자들의 역할과 기대를 안정시켜 예산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 ④ 예산과정의 권력중심을 입법기관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입법기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 ⑤ 예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정답] ⑤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의 경우 전년도 예산을 기본으로 하고 약간 증가시키는 수준의 점증적 예산을 채택하게 되므로, 정치적 마찰이나 중앙관서의 반발을 극소화시키고 특정 부문의 예산이 급격히 늘거나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예산 편성의 시급한 전환이 요구될 때 빠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예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좋은 접근법은 합리주의적 예산결정이다.

19. 다음 중 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유재는 소비의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이다.
- ② 공유재의 비극은 비용의 집중과 편익의 분산관계로 인해 발생한다.
- ③ 사적 이익의 극대화가 공공이익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 ④ 공유재에서는 양심적인 행위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⑤ 공유재의 보존을 위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및 근거로 작용한다.

[정답] ② 공유재의 비극은 비용은 분산되나 편익은 집중되어 사회적 비용보다는 개인의 편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20. 다음 중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행정기관은 국가사무를 집행하고자 중앙부처가 설치하는 일선집행기관이다.
- ② 특별행정기관은 국가사무의 효율적 집행과 광역적 추진에 효과적이다.
- ③ 특별행정기관은 중앙부처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부처이기주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④ 특별행정기관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측면에서 볼 때 자치단체인 일반행정기관의 책임행정 구현에 공헌한다.
- ⑤ 특별행정기관은 일반행정기관과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문제로 제기된다.

[정답] ④ 특별행정기관은 중앙통제가 강조되어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자치단체의 책임행정 구현을 저해하게 된다.